

전남 교통망 혁신 가속…SOC 국비 10년 연속 1조원 돌파

도로분야 5600억 반영…연륙·연도교 등 현안사업 속도

내년 확정 차기 국가계획에 대규모 신규사업 반영 총력

전남도가 내년도 SOC 국비 1조4000억원을 확보하며 도로·교통망 혁신에 속도를 낸다. 10년 연속 SOC 국비 1조원 이상 확보 성과다. 고속도로·국도·국지도 확충과 연륙·연도교 등 핵심 현안이 본격 계도에 오르면서 지역 간 이동 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확보한 내년도 SOC 국비는 총 1조495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로 분야에만 5600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국도·

국지도 확충, 연륙·연도교 사업 전반에 재정 동력이 불었다.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분기점을 맞았다. 광주~강진을 잇는 1단계 구간은 잔여 공사비 1336억원을 전액 확보해 2026년 11월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2단계인 강진~완도 구간도 기본·실시설계비 80억원이 반영돼 1단계 준공 이전 착수가 가능해졌다. 전 구간 완공 시 완도~광주 이동 시간은 2시간10분에서 1시간10분대로 약 1시간 단축된다. 남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구간 공사(나주 남편)

부권 생활권 확장과 물류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국도·국지도 사업에는 20개 지구에

4140억원이 투입된다. 압해~화원, 화대~백야, 비금~압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대형 연륙·연도교 4개 지구에만 2635억원

이 반영됐다. 섬 주민 교통 기본권 개선과 함께 영광~목포~여수~부산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완성에도 속도가 붙는다.

특히 고흥~봉래 국도15호선 확장사업은 내년도 예산 80억원이 배정돼 조기 착수가 가능해졌다. 당초 차기 계획 대상이었으나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안에 앞당겨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전남 주요 사업을 추가 반영할 여지도 커졌다.

이와 함께 고흥 벌교~순천 주암(605억원), 곡성 석곡IC~겸면(309억원), 화순 동면~순천 송광(199억원) 등 간선 국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지도는 담

양 고사~창평(내년 착공) 등 5개 지구에 106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2026년 확정될 도로 분야 차기 국가계획 반영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7건(23조4000억원 규모·영암~광주, 고흥~광주 등)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19건(2조7000억원) 등 총 26건, 26조원 규모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핵심 SOC가 정부예산에 대거 반영되며 도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차기 국가계획에도 전남 현안이 폭넓게 담기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서구 물품공유센터 5호점 개소 22일 광주 서구 화정4동 월광교회에서 열린 '서구 물품공유센터 5호점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는 천원 기프트. 공연·교육·놀이 물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서구는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1호점), 동전동 행정복지센터(2호점), 농성1동 서로이음센터(3호점), 서창동 상무역골드클래스 상가(4호점)에서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공유해 자원 절약과 생활비 부담 완화, 공유문화 확산 등에 기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갯벌, 이산화탄소 흡수 하루평균 '528t'

보건환경연구원, 전국 최초 온실가스 72시간 측정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신안 지도비식생 갯벌 탄소감축원 인증을 위한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연구를 전국 최초로 72시간 연속 측정한 결과, 일일 약 554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시책사업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43.8%를 차지하는 전남 연안 갯벌 중 신안 지도비식생 갯벌에 대한 탄소감축원 인증을 위한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연구를 지난 2~7월 중 4회 수행했다.

연구의 특징은 기존 연구와 달리 갯벌 표면에서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측정하는 개방형 역학 챔버를 이용해 일정한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챔버에 주입하면서 72시간(5분 단위) 연속 자동측정한 것이다.

갯벌에서 탄소흡수량 산정시 장기간 연속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갯벌에서 공기 중 탄소 흡수량이 표층에서 광합성량 및 미생물 호흡에 의한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간은 호흡이 주로 이뤄져 일몰 이후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탄소흡수량이 과대 산정될 수 있어 주·야간 측정값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 갯벌의 탄소 흡수능은 292mgCO₂/m²·hr~95mgCO₂/m²·hr(평균 9 mgCO₂/m²·hr)로, 평균 1m²에서 시간당 9mg을 흡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의 갯벌 면적 총 2443.3km²의 일일 이산화탄소 평균흡수량은 528t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약 5만5000대 배출량에 달한다.

한국배출권 거래가격(1만500원)을 반영하면 일일 약 554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비식생 갯벌의 블루카본 인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향후 전국 최대 면적을 보유한 전남 갯벌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업 결과를 10월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발표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 12월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양정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관리과장은 "추후 미생물의 광합성과 관련있는 일사량 측정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자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holbul@gwangnam.co.kr

“구조 검토·용접 결함, 사고 키웠을 가능성 높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원인 진단 토론회

정준호 의원·신수정 의장 “제도 개선 필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와 관련, 시공 단계에서의 하중 관리와 구조 안전 검토, 접합부 시공 품질 등이 적절히 관리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사진) 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원인과 대책을 진담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공공발주 공사의 구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조창근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김의용 국토교통부 건설사 고조사단 위원·김병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시공 단계의 불안정성, 트러스 사재·CFT 기둥 결함, 구조설계도서

미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고 현장은 길이 48m 장스팬 트러스와 CFT 기둥이 들어서는 고난도 특수 구조물로, 시공 단계에서 정밀한 구조 관리가 필수다”며 “시공 중 구조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없는 무지보 공법상 하중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타설로 인해 구조물에 비틀림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술적 원인 규명에 머물지 않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홍근 건축사는 “구조가 잘못됐는지 용접이 부실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며 “왜 그런 판단과 작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 흡수되지 못하는 ‘건설 생태계’ 자체를 문제로 지적했다.

설계 변경과 비용 구조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조창근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구조가 변경되면 용접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설계 변경이 기술적 보완보다는 비용 절감 논리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수 공법 적용 시 별도의 구조·시공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용 국토교통부 건설사 고조사단 위원은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조장대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하면서도 국내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운영 방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기술자의 참여가 설계 이후 단계에서 형식화되고 시공 과정에서 실제 위험을 걸러내는 문서와 검토 체계가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부장은 무리한 공기 단축과 안전관리비 구조를 사고의 배경으로 언급하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 절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자료를 모두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짚어보는 것에 토론회의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신수정 의장과 함께 제도적 변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백서를 제작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계 변경과 발주 책임을 포함한 공공 건축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옥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문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법 발의

“전남 도농복합도시 29개 면 지방소멸 고위험 사각지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산어촌 지역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 지역 인구에 가려 통계상 ‘정상 지역’으로 분류돼 왔던 시(市) 안의 읍·면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에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9곳(85%)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지수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곳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1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누는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시·군·구 단위로만 적용하고 있어, 도농복합도시에 포함된 면 지역은 실제 인구 구조가 왜곡된 조와 무관하게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도시 지역인 동의 인구가 함께 반영되면서, 면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통계상 희석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독립적인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정책에서 배제돼 온 농산어촌 읍·면 지역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지방소멸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도,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도청 1층에 29일까지 설치…도민 추모 공간 마련

전남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도민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전라남

도청 1층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 도민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

다고 밝혔다. 기간 동안 도민 누구나 헌화

와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으며, 도는 현장에 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한다.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분향소는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도민이 함께 연대하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공식 추모 일정도 이어진다. 1주기 추모식은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공

동 주관해 29일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27일 오후 2시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사고 발생 시각인 29일 오전 9시3분에 맞춰 도내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을 울려 희생자를 기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